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종부세 50만명에 4조7천억 고지... 작년보다 78만명2조원 감소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 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 50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세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인원, 세액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납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분납 조건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며 분납기한은 2024년 6월 17일까지다.

올해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가운데 종부세가 100만원이 넘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15일까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 올해 종부세 달라진 세법... 다주택자일수록 꼼꼼한 체크 필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기본공제 상향에 이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고, 12억원을 초과해도 세율 27% 아래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훨씬 여유로워졌다.

3주택자는 중과세율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구간별로 거의 1%씩 세율이 줄어들었고, 세 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괄 적용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공동명의 주택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300%를 적용하던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도 150% 일괄 하향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이 포함됐다.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면서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한다.

### 조세소위, 기업승계 증여세 완화 합의... 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혼 부부 증여세 공제한도는 결혼 시 1인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혼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아는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도 추가했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가구에도 똑같이 적용 될 방침이다.